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로 국민주권정부 열린재정 본격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❶ 기존 신규사업 + 지출효율화, 기타 자유제안 추가  
❷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포상 실시(최대 600만원)
- (국민참여단 내실화) ❶ 기존 300여명 → 사회적 약자 포함 600여명  
❷ 성/연령/지역별 샘플링 선발에서 전국민 공모방식 추가 ❸ 찾아가는 국민제안 확대
- (소통 강화)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접근성 제고
- (홍보 강화) 기존 홈페이지 위주에서 탈피, 온·오프 라인 집중 홍보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 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정보소외지역 SW 교육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등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1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 중 예산 낭비, 제도개선 등의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기타 나라살림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더욱 확대하였다. 인터넷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받아 현장에서 사각지대 문제해결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들에게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2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다음으로 직접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의 인력 모집단(pool)을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로 선발했지만 금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국민참여단 선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청년,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여러 계층들을 참여단에 포함시켜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편의성(user convenience)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재편할 계획이며, 5개년 사업설명 자료를 추가하여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

#### 4 중앙과 지방정부 연계 강화 등

또한,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의 뚜렷한 소통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된 참여예산 제도를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며 참여예산 합동 설명회 개최, 합동 홍보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 5 소통과 홍보 강화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참여예산 홈페이지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확대하겠다.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제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mybudget.go.kr)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을 2월 28일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 < 참고: 국민참여예산제도 경험자의 참여 후기 >

##### ■ 사업 제안(찾아가는 국민제안 포함) 참여 후기 :

- “공무원이 아닌데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반가웠고, 내 생각이 공감을 받아서 좋았고 힘을 얻는 부분이 있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도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음에 들었다”

##### ■ 국민참여단 참여 후기 :

- “참여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만 예산을 비롯한 정책 과정에 대하여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언젠가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 “국민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숙의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한 번 경험해보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공 석)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parkchaelin@korea.kr)



## 참고 1

###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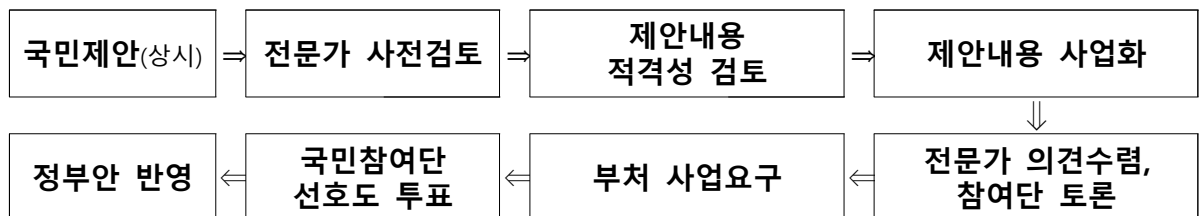
- (의의) 정부 예산 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18년 도입, 국가재정법 제16조, 시행령 제7조의2 의거)
- (참여자격)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에서 제안
- (제안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제안범위) ①사업발굴형, ②지출효율화형\* 제안

\* '26년 예산 편성시부터 도입('25.7월~)

#### ①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 단순 민원, 재정소요 없는 규제철폐, 지자체 사업, SOC 등 대규모 사업 등은 비해당

- (절차) 소관부처가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적격제안에 대해 국민참여단 토론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예산 사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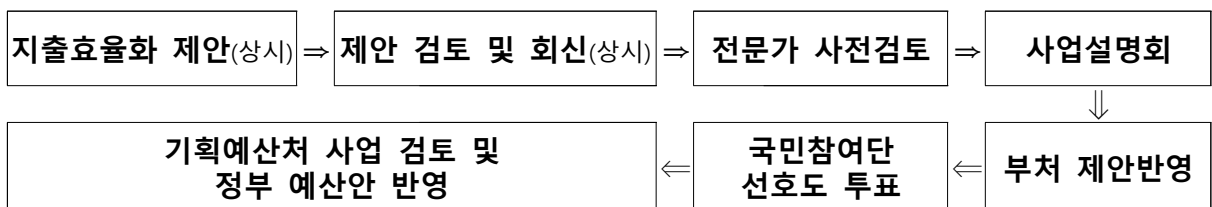


※ '26.4월 접수분까지 '27년도 예산 반영, '26.5월 이후 접수분은 '28년도 예산으로 검토

#### ② 지출효율화형: 중앙정부 예산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절차) 소관부처가 검토 후, 제안사업에 대해 국민참여단 토론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출구조조정 등에 반영

##### < 추진절차 >



※ '26.6월 접수분까지 '27년도 예산 반영, '26.7월 이후 접수분은 '28년도 예산으로 검토

## 참고 2

##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부터 국민제안 범위 확대, 접근성 제고, 참여단 규모·역할 강화 등

		2025년 이전(AS-IS)	2026년(TO-BE)
기본방향		▶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도입·운영	▶ 예산편성·집행·제도개선 등 <b>수 단계</b> 국민참여 → <b>국민주권예산</b> 구현
제안범위		▶ 신규사업 발굴 * '25.7월 지출효율화 제안 시범운영	▶ 신규사업 발굴 ▶ <b>지출효율화</b> → <b>우수제안 포상</b> ▶ <b>기타 재정 자유제안 상시 접수</b>
참여 접근성		▶ 온라인 플랫폼(mybudget.go.kr)	▶ <b>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b> * 제안메뉴 확대, 주민참여 연계강화 등 ▶ <b>대면방식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성화</b> * 취약계층, 협·단체 등 현장 인터뷰 확대
국민참여단	규모	▶ <b>現 300여명</b> (지역·성별·연령별 안배)	▶ <b>600여명</b> (2배 수준 확대) * <b>취약계층</b> 참여 확대(청년·노인·장애인 등)
	선발	▶ 민간운영업체 자체 Pool 기반 선정	▶ <b>일반국민 공모 선발 추가</b>
	역할	▶ 신규사업 제안 숙의과정 참여 * 사업설명회 참석, 선호도 투표	▶ <b>신규사업 + 지출효율화형 숙의 참여</b> ▶ <b>분야별 포커스 그룹 분류</b> → <b>집행효율화 상시모니터링 강화</b>
중앙-지방 협업		▶ 중앙-지방 협력없이 분절적 운영 (설명회, 홍보 등 각기 추진)	▶ <b>중앙-지방 참여예산 플랫폼 연계</b> * 지방플랫폼(주민e참여) 접속 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링크 이동 가능 ▶ <b>중앙-지방 참여예산 합동설명회 개최·홍보 등 협력 강화</b>
민간전문가 지원협의회		▶ <b>現 16명</b> (국책연구기관, 교수 중심)	▶ <b>40여명</b> (2배 수준 확대) * 재정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등 추가
홍보		▶ 참여예산 홈페이지 소통 위주	▶ <b>온-오프라인 소통·홍보 확대</b> * 기차 객실 내 화면, 민간전광판, 부처보유매체 등 적극 활용